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1년 Vol.12

D R &
A J 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자문 그룹을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제2차 전체회의에는 김부겸 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였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는데,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본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10. 27.자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별첨1][보도자료] 211018 탄중위 2차 전체회의

환경부 –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시행령에는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별첨2][보도자료] 211019 환경책임투자 범위 구체화 -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되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10.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되었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1100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규제법무담당관)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2021 글로벌 ESG 포럼'에서 이동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실장은 "내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접목하는 'ESG 통합'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위탁투자로 확대할 것이며, ESG 평가등급이 낮은 기업은 벤치마크(BM) 대비 초과 편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ESG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 세계 ESG 관련 투자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2조8390억달러 정도였던 세계 ESG 관련 투자자산 규모는 지난해 35조3010억달러까지 증가하여, 4년간 54.5%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2003년 세계 12개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AMWG(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가 ESG 관점을 결합한 투자 방식과 투자 성과 간의 관계성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2004년 6월 발표된 결과 보고서에는 '환경, 사회 및 기업 지배구조 이슈가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2015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나온 보고서도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성과가 우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ESG 평가등급 상승폭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간의 주가 상승률 차이가 연 평균 8.85%에 달했습니다. ESG 요소에 대응을 잘한 기업이 못한 기업 대비 장기적으로 우월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기업이 롱런한다"…연금 시장에 부는 'ESG 바람' (한국경제 10월 13일자 보도)

2. 8일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산업계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단계)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2030년 감축 계획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점과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 7억2760만 t에 달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4억3660만 t까지 줄여야 합니다.

   산업계는 정부의 NDC 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발표안대로 NDC를 확정하면 에너지·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경제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하면 탄소중립 속도를 줄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에너지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캠페인)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도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인데,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이 지나치게 과감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주요국의 2030년 NDC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빨라진 탄소감축 시계… "에너지 전환 앞당길수록 산업 경쟁력 강화" (동아일보 10월 14일자 보도)

3. 최근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기업 10곳 중 8곳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납품·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ESG'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망 ESG는 기업의 납품·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인권 등을 요구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것으로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급망 투명성법', 2015년 영국 '현대판 노예 방지법' 등에 이어 올해 EU에서 '기업 공급망 실사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 실천을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것도 공급망 ESG의 일환입니다. 윤철민 대한상의 ESG경영팀장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협력업체들의 인권·환경·지배구조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기업들의 공급망 ESG 협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면서 "공급망 ESG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기업 10곳 중 8곳, "공급망 ESG 관리 절실" (이데일리 10월 14일자 보도)

4. 국제적으로 ESG 관련 정책은 그동안 EU(유럽연합)가 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ESG 정책은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지난해부터 정책 기조가 적극적인 동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금융 분야에서 ESG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금융당국은 ESG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부는 ESG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금융당국은 ESG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업들이 ESG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ESG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통해 저탄소(E)·포용(S)·공정(G)경제로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ESG 확산을 경제 대전환 가속화의 기회로 활용, 경제 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를 실현한다는 전략입니다. 정부가 ESG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ESG 정책 방향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초점이 있다"면서 "각 분야 정책 간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공시에 ESG 포함… '탄소중립' 위한 경영 대전환 [2021 세계금융포럼] (세계일보 10월 17일자 보도)

5.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추진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권 장관에게 ESG 경영추진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등 구조적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ESG경영과 관련해 "저희들도 진짜 골치가 아프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유럽에서 관세방안을 밝히는 등 어떤 식으로든지 비용을 치르게 된다. 탄소중립 수준 조절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정책방향이 같기 때문에 위에서 흔들면 시설 등도 들어가야 해서 비용부담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대응여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짜 골치아프다"…장관도 머리흔드는 중소기업ESG (머니투데이 10월 18일자 보도)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ESG, 건설/부동산, 기업자문

E sblee@draju.com

T 02-3016-5276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ESG, 기업자문, 금융

E shki@draju.com

T 02-3016-8702



노현철 파트너변호사

ESG, 국제, 기업자문

E hcnoh@draju.com

T 02-3016-873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2021년 Vol.1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8,10~16층

T. 02-563-2900 E.draju@draju.com H. www.draju.com